

2023. June

통권

제146호

발행인 김현철 | 발행일 2023년 6월 14일 |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 여 정 선임연구위원

임 희 진 선임연구위원

요약

- 본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되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이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전환기이자,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중요한 변화에 직면한 시기에 향후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음. 이를 통해 2023년부터 향후 5년 간 적용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5년 그 이상을 바라보며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연구내용 측면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청소년이 처한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 청소년정책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학계, 현장 종사자,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등) 및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음. 연구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문헌 연구, 2차 자료 검토,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음.
- 연구 결과, 향후 청소년정책이 지향할 비전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의 방향성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청소년정책을 둘러싼 주요 환경변화 및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로 ①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 ②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③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정책, ④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⑤효율적·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음.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연구과제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정책은 정책 여건과 거시적 환경에서 커다란 변화에 직면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되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청소년정책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처함.
- 특히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제8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새로 선출되었으며, 2010년부터 청소년정책을 관장했던 여성가족부에서 타 부처로 주무부처 이관 논의가 전개되었음. 이러한 정책추진 여건의 변화는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정책에 광범하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점차 심화되는 계층 간 격차, 빠르게 전개되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영향과 기후 변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가 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지난 3년간 전개된 코로나19 사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생활공간을 빠르게 이동·확장시켰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배태시키기도 하였음.
→ 청소년정책은 정책 여건과 사회환경 측면에서 모두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관점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모색 필요

- 본 연구는 이처럼 정책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수년 간 청소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학계, 현장 및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추진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제7차 기본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5년 그 이상을 바라보며,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 유관 정책계획 자료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변천과 흐름,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음. 또한 해외 청소년정책 자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큰 흐름, 기조와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동향이 각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검토 자료: (국내)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등 유관 정책계획
(해외) UN, EU 등 국제기구 및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등 청소년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주요국의 정책계획 사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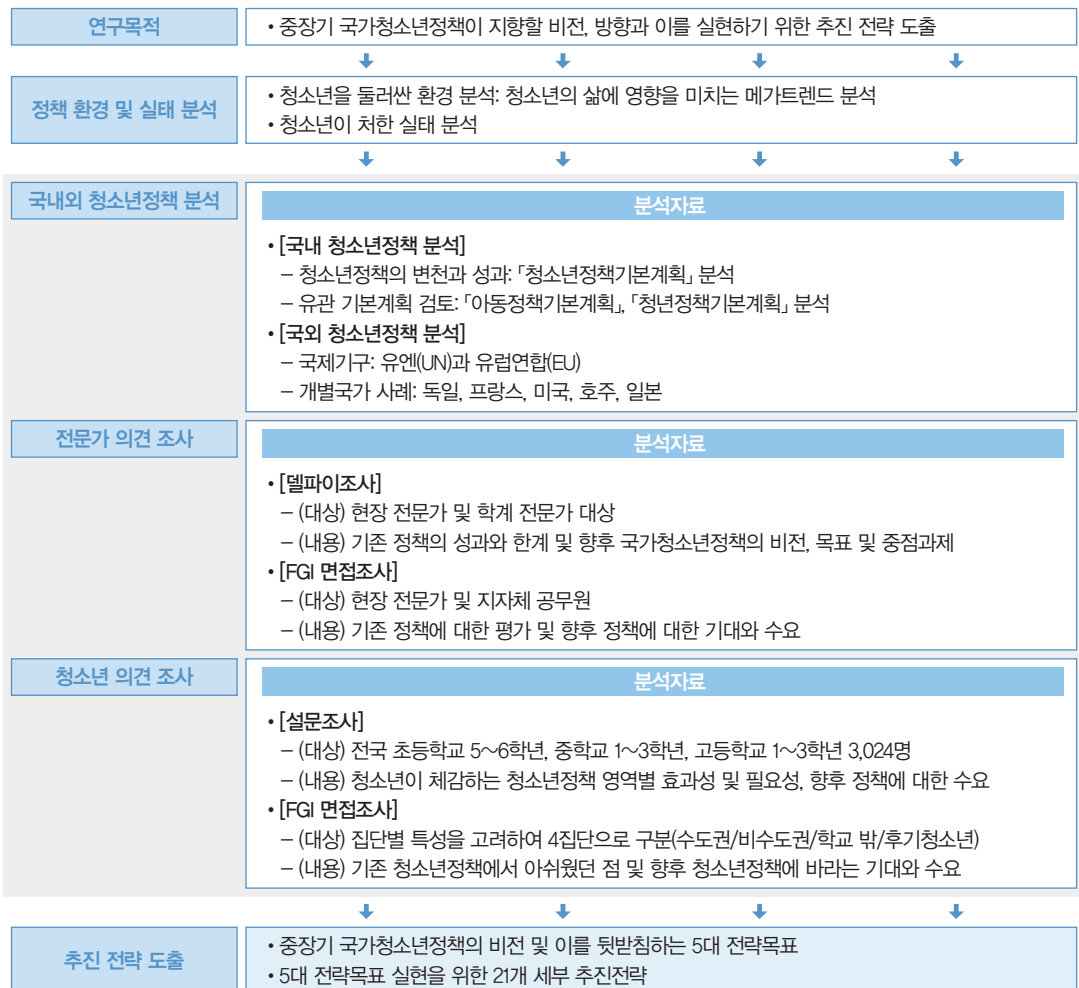
-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 청소년정책에 대한 효과성 및 필요성, 향후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3,024명(초 5-6학년, 중 1-3학년, 고 1-3학년)임.

전문가 델파이조사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장기 청소년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대상은 유관 분야 교수 및 연구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16명, 현장 전문가 11명 등 총 27명임.

초점집단인터뷰(FGI)

- 정책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음. FGI는 청소년 16명(특성별로 4개 집단으로 분류) 및 전문가 9명(현장 전문가 4인, 지자체 공무원 5인)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그림 1] 연구의 개요

3. 연구결과

▶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결과

- 국내·외 청소년정책 자료 검토 결과, 최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강조하고, 자립 기반 마련 및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음. 접근방법으로는 생애주기적 접근을 기초로, 청소년 생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지향하고,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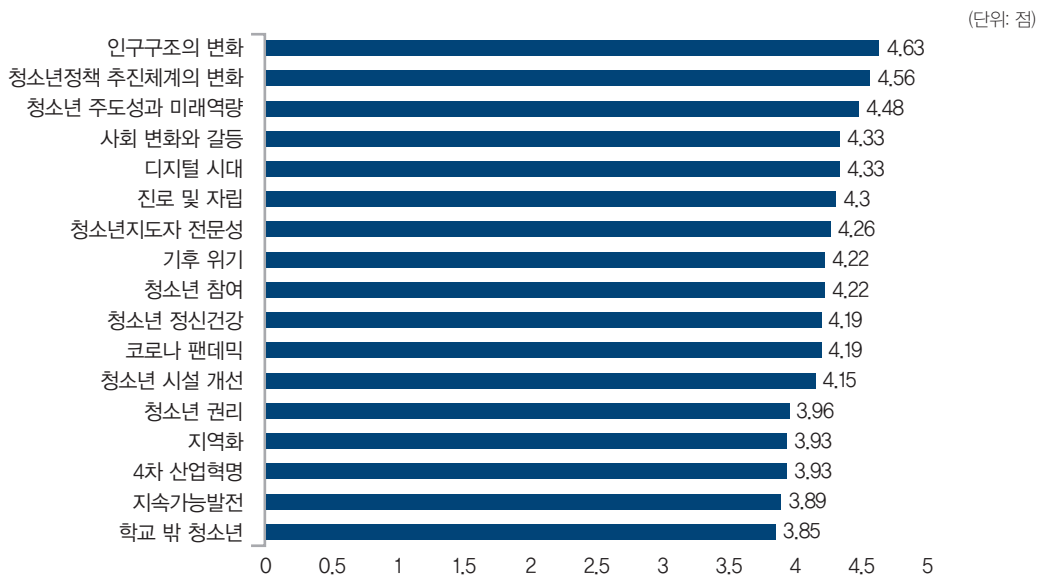
[표 1]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주요 시사점

주요 시사점	내용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강조	• 국내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은 정책당사자의 주도성 및 권리, 참여를 강조하는 추세 • 해외 사례에서도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강조되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권한 강화를 강조
자립 기반 마련	• 프랑스의 청소년정책계획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자립을 위한 부처 간 연계를 강조 - 자립 여건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데 중점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독일 및 호주에서는 가정 내에서 간병 책임을 지거나, 무급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책임을 지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호주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에서는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약 명시 * 소외된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 시설이용 청소년, 소년원 수감 청소년, 노숙 청소년, 장애 청소년, 만성질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니트(NEET)청소년
생애주기적 접근	•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청년기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생애주기적 접근 필요 - 미국 청소년정책은 생애주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정책지원의 틀 마련
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	• 각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이 이행을 위하여 교육, 고용, 안전, 건강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청소년의 생활세계를 포괄적으로 지원 - 특히 프랑스에서는 교육과 구직, 주거, 보건지원과 함께 휴가권까지 '권리'로 간주하면서 개인의 균형 있는 생활을 위한 정부지원을 시민사회의 의무이자 기회평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원리로 강조
중장기 정책계획의 유연성 확보	• 정책환경 변화 및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일본의 경우,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에 대략 5년 단위의 개정을 전제하면서도 3년차에 중간점검을 통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명시
체계적인 성과 관리	• 중장기 정책추진 과정에서 과제 이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사항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도록 성과 관리 실시 - 유엔은 성과관리 도구로 스코어카드를 도입하여 유엔 기구와 유엔국가팀의 성과를 확인하는 방안 적용 - 일본은 아동·청소년 개인, 가족 및 친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인터넷 공간 등 영역별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발간되는 아동·청소년백서에 수록하고 인덱스 보드로 가시화하여 공개

▶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결과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와 현장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델파이 1~2차 조사결과,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확인되었음.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청소년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그로 인해 정책대상자의 규모와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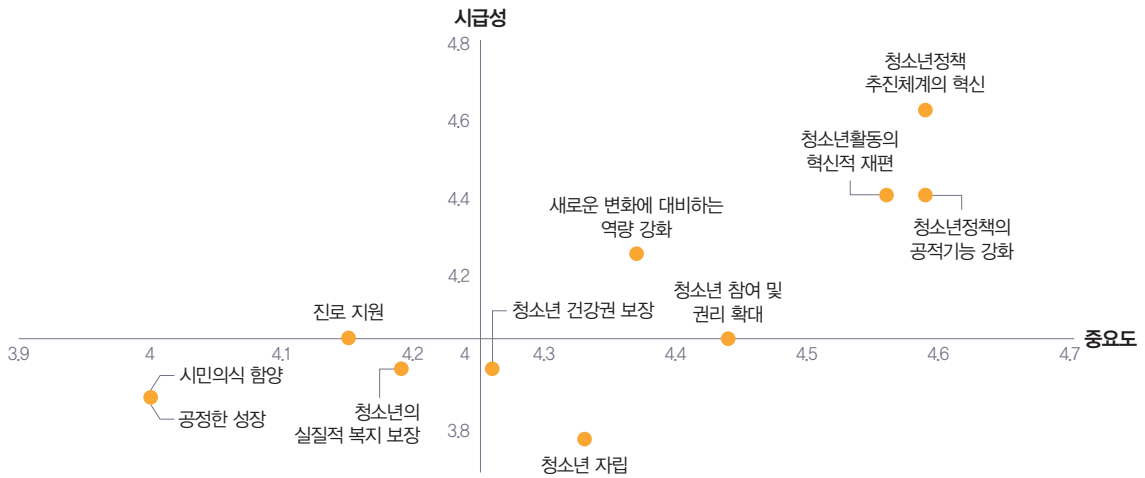
-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청소년 주도성과 미래역량’, ‘사회 변화와 갈등’, ‘디지털 시대’, ‘진로 및 자립’,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기후 위기’, ‘청소년 참여’, ‘청소년 정신건강’, ‘코로나 팬데믹’, ‘청소년 시설 개선’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언급된 키워드 중에는 사회환경 변화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하는 요인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정책대상자의 절대적 규모 축소에 대한 위기감,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필요성, 사회변화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빈부·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에 대한 고려,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기후위기 등이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회환경 변화로 도출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주도성과 미래역량강화, 진로 및 자립지원 등이 요구되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증진, 청소년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주: 제시된 수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부터 '매우 중요하다'(=5)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임.

[그림 2] 국가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회환경변화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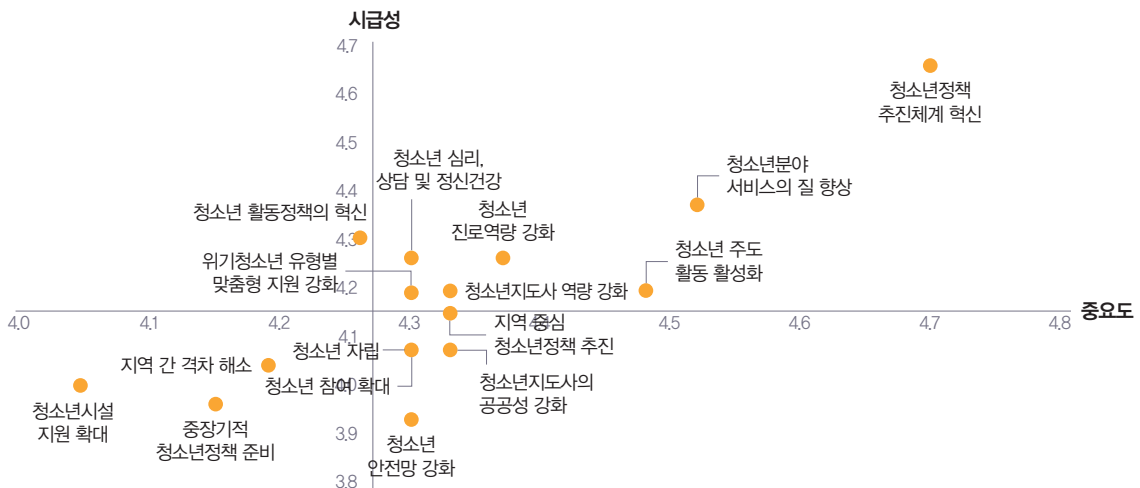
- 정책목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정책목표 후보군을 도출하고, 2차 델파이조사에서 각각의 정책목표(안)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성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청소년정책의 공격기능 강화', '청소년활동의 혁신적 재편',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 및 권리 확대'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목표로 도출되었음.
- '청소년 건강권 보장', '청소년 자립'은 중요하지만 시급성이 다소 낮은 항목이었고,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보장', '진로 지원', '시민의식 함양', '공정한 성장'은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제시된 항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주: 중요도 및 시급성은 각각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중요도를 가로축, 시급성을 세로축으로 설정하여 교차지점을 표현한 것임.

[그림 3] 정책목표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요약

-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중점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델파이 의견조사 결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음.
- 그 외에 ‘청소년분야 서비스의 질 향상’,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청소년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도 비교적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분류되었음.



주: 중요도 및 시급성은 각각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중요도를 가로축, 시급성을 세로축으로 설정하여 교차지점을 표현한 것임.

[그림 4] 중점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요약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주요 시사점 요약

주요 시사점	내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전반적 쇄신	• 재정 확충 및 재원 다각화 • 중앙정부 수준에서 관계부처 간 실질적인 정책 연계/조정 기능 수행 •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인 전달체계 구축 • 정책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국민 정책 홍보 대폭 강화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및 추진	• '수요자들이 먼저 찾는 정책, 정책대상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전환 • 수요자 중심 정책추진을 위해, '진로'를 주요 정책 아젠다로 부각 • 진로 지원 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개선 필요
청소년활동 정책의 혁신 및 활동 활성화	• 청소년인구 감소, 교육정책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축소 등 다양한 요인에서 유발된 청소년활동 위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 필요 •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 및 기후환경 위기,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 고려 필요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지속적 추진 및 강화 • 청소년 건강권 강화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 유입 촉진 • 체계적·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모하는 청소년정책 환경에서 경쟁력 확보 지원

▶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결과

- 청소년정책 방향과 전략 제시를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그간 추진된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정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영역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 순으로 관련 정책이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표 3] 정책영역별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필요성
전체		3.06	3.18	3.19	3.25	3.24	3.36
성별	남자	2.97	3.09	3.09	3.16	3.13	3.24
	여자	3.14	3.27	3.27	3.34	3.35	3.47
학교급	초등학교	3.14	3.20	3.24	3.25	3.36	3.40
	중학교	3.02	3.12	3.16	3.21	3.19	3.30
	고등학교	3.04	3.23	3.17	3.30	3.20	3.39
지역 규모	대도시	3.06	3.19	3.20	3.27	3.23	3.36
	중소도시	3.05	3.18	3.17	3.24	3.24	3.35
	읍면지역	3.07	3.19	3.19	3.26	3.25	3.36

주: 1) 해당 영역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음.

2)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함.

- 청소년 대상 FGI 실시 결과, 향후 청소년정책은 수요자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 정책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청소년의 관심과 니즈가 높은 '진로지원' 정책이 내실화되기를 희망하였음. 또한 청소년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청소년참여가 이전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대상자 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보였음.

[표 4] 청소년 의견조사 결과 주요 시사점 요약

주요 시사점	내용
수요자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 추진: 진로지원 강화	• 수요자인 청소년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보다 집중할 필요 → 진로지원 정책 내실화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진로체험, 자유학기제의 질적 개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의 양적·질적 확충 • 청소년 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로활동, 진로체험 다양화 및 내실화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 확대 •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높은 요구: 온라인도박, 마약문제 등 청소년범죄, 근로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 스포츠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청소년 권리 보장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청소년을 미래의 '예비적 시민'이 아닌, 지금 현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 • 기존의 참여기구 중심의 참여에서 탈피하여, '일상에서의 참여',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로 전환 • 청소년정책 전반에서 청소년 주도성 강화 →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가 청소년정책 전반의 운영 원리로 자리 잡도록 정책 추진 전략 수립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청소년정책 추진	• 아동-청소년(전기~중기~후기)-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정책 추진 필요 • 각 발달 단계별로 각별히 요구되는 정책을 강조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청소년정책에서의 상대적 격차 해소	• 청소년정책에서 지역 간 격차(수도권-비수도권 간 진로체험, 참여활동 등 접근성 격차 등) 해소 • 학교 안/학교 밖 청소년이 받는 혜택 및 정책적 지원에서의 격차 완화 •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소관부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격차 해소

4. 정책제언

▶ 정책비전

- 각 단계별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중장기 국가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비전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을 설정하였음.
 -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에는 청소년참여 확대, 권리 보장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 청소년은 미래의 예비적 시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함. 특히 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수동적 시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상(像)을 담고 있음.
 -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과 성장, 청소년 건강권 보장, 온·오프라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복지 등의 가치를 포괄함. 이를 통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함.
 -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에는 청소년 주도성, 미래, 꿈, 진로 등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 스스로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동시에,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의 청소년 상을 내포함.
→ 제시된 비전은 횡적으로는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등 청소년정책의 전(全) 영역을 포괄하고, 종적(시간적)으로는 청소년의 현재-미래를 포괄하도록 설정되었음.

▶ 전략목표

- 청소년정책을 둘러싼 주요 환경변화 및 연구결과 도출된 정책수요를 토대로,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로 다음의 5가지를 설정함.

주요환경변화	제기되는 문제들 / 정책반영 수요	5대 전략 목표의 도출
• 인구구조의 변화	• 정책 대상인 청소년인구의 급감 • 다문화청소년의 증가	→ 전략목표 1.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
• 저성장 및 사회양극화 심화 • 코로나 팬데믹 및 포스트 코로나	•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지원	→ 전략목표 2.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 • 기후 환경 위기	•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 • 기후 세대인 청소년의 역할 강화	→ 전략목표 3. 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 사회구성원의 참여 요구 증대 •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 청소년의 시민성 및 권리 확대 요구 • 청소년 참여 정책의 개편 필요	→ 전략목표 4.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 국정과제로 '일 잘하는 정부' 지향 •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조직의 변화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 지역 및 현장을 잘 지원하는 청소년정책	→ 전략목표 5. 효율적 · 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그림 5]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의 도출

▶ 추진전략

- 정책비전과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1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함.

비전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	
전략 목표 및 추진 전략	1 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	1-1. 청소년정책에서 '진로' 아젠다 부각 및 강화 1-3. 정책 제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추진 강화 1-2. 다문화 청소년 지원 확대 1-4.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2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2-1.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 대응 2-3.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 2-2. 다양한 정보에 대한 통합적 접근 2-4.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서 공동체 역량 강화
	3 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3-1.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 실현 3-3.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 권리보호·근로권익보호 강화 3-2. 청소년참여 패러다임 전환
	4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4-1. 청소년정책의 자립지원 기능 강화 4-3.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연속적 접근 4-5.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강화 4-2. 사각지대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4-4. 청소년 생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
	5 효율적 · 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5-1. 청소년정책 재정 확충 5-3. 지역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5-5.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5-2. 환경변화를 반영한 법령 재정비 및 전달체계 구축 5-4. 유관분야와의 협업 거버넌스 확립

[그림 6] 국가청소년정책 비전,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구조도(안)

▶ “전략목표 1: 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 추진전략

- 향후 청소년정책은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지향해야 함.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교육정책 등 인접 영역에서 유사한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 수요자인 청소년(및 부모)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보다 집중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함.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수요자의 니즈가 높은 분야인 ‘진로’ 영역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부각하여 내실화하고,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음.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추진전략	내용
1-1. 청소년정책에서 ‘진로’ 아젠다 부각 및 강화	• 청소년정책에서 ‘진로’ 개념의 확장 및 정책영역 전반에 반영 • 대상별 맞춤형 진로 지원 및 학교 교육과의 유기적 연계 • 신산업트렌드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진로 지원 등 진로체험 활동의 질적 개선
1-2. 다문화 청소년 지원 확대	• 다문화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지원 제공 - 한국어 교육 체계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실화 • 지역 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1-3. 정책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추진 강화	• 청소년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책추진 강화를 통해 수요자의 정책체감도 제고 • 청소년정책영향평가 도입을 통해 법령이나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이 청소년의 삶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
1-4.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추진 •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전략목표 2: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추진전략

- 향후 청소년정책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사회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준비하고, 청소년인구 감소 및 지방인구소멸, 저성장 및 사회양극화, 코로나 팬데믹 등 직면한 사회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영역별로 분절되어 산재하는 정보를 통합하는 정보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온라인환경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기후세대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정책 영역에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집단 간 사회갈등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공동체 역량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	내용
2-1. 청소년정책의 디지털 전환 대응	• ‘(가칭) 청소년 분야 디지털 전환 종합연구’를 통해 청소년 분야에서 검토 또는 고려해야 할 디지털 전환의 기본 틀 설계 • 청소년정책 분야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디지털환경에서의 청소년공간 구축 및 활용
2-2. 다양한 정보에 대한 통합적 접근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청소년안전망)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실태조사 데이터 연계 활용

추진전략	내용
2-3.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디지털 유해환경에서의 폭력·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온라인도박 확산 예방 정책 필요 • 디지털 시민성 교육 확대 및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2-4.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서 공동체 역량 강화	• 기후위기 대응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 “전략목표 3: 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추진전략

- 셋째, 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국제기구 및 해외 각국의 청소년정책 검토 결과, 청소년 권리 강화 및 참여권 보장은 가장 강조되는 공통적인 흐름으로 파악되었음.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청소년을 미래의 예비적 시민이 아닌, 현재 시민으로 인정하는 관점의 전환이 강조되었고, 청소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청소년 권리강화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음. 이에 ‘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향후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주요 전략목표로 도출하였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교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근로권익과 같이 청소년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지만 실제 보장이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	내용
3-1.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 실현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
3-2. 청소년참여 패러다임 전환	• ‘정책사업으로서의 참여’를 ‘청소년정책 운영 원리로서의 참여’로 전환 • ‘참여기구 중심의 참여’를 ‘일상적 참여’로 전환 • ‘형식적 참여’를 ‘실질적 참여’로 전환
3-3.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근로권익보호 강화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 새로운 유형의 근로형태 종사 청소년을 포괄하는 보호 방안 마련

▶ “전략목표 4: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추진전략

-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은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집단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고루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각지대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누락되는 시기 없이 아동~청소년~청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광범하게 아우르는 정책을 비롯해, 기존 청소년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후기청소년 정책 강화 등이 요구됨.

추진전략	내용
4-1. 청소년정책의 자립지원 기능 강화	• 청소년특별지원사업 규모 확대 및 지원 기준 완화 •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발굴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청소년 대상 경제·금융교육 확대 및 청소년 취·창업 지원을 통한 광의의 자립 지원

추진전략	내용
4-2. 사각지대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 기존 맞춤형 복지지원 대상(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비행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한)부모, 저소득층 청소년, 나홀로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신규 정책대상(가출돌봄청소년(영 케어러), 수용자 자녀 청소년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 추진
4-3.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연속적 접근	•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라 수요자에게 더 필요한 정책에 중점을 둔 지원 방안 설계 및 적용
4-4. 청소년 생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	• 교육, 안전, 건강, 고용, 여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 • 문화 · 예술 및 스포츠활동에 대한 접근권 보장 지원
4-5.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강화	• 청소년정책 중 만 18세를 상한으로 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을 만 24세로 확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후기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 후기청소년의 수요가 큰 정책(근로권익보호 정책, 보호종료 후 연계 · 지원 정책 등) 지원 활성화

▶ “전략목표 5: 효율적·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추진전략

- 전반적인 정책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됨. 주무부처 이관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노정했던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한 단계 진전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확충이 요구됨.
 - 또한 청소년정책의 특성 상,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는 바, 향후 청소년정책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대상 중심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복지 등 유관분야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이전보다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	내용
5-1. 청소년정책 재정 확충	•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확충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연계
5-2. 환경변화를 반영한 법령 재정비 및 전달체계 구축	• 정책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달체계 정비 • 환경변화를 반영한 청소년 관계법령 재정비
5-3. 지역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 조직 및 인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및 육성전담공무원 의무적 배치 연계 검토 • (가칭) ‘청소년친화도시’, ‘청소년행복도시’ 등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선정 공개 • 지자체 공약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매니페스토 접근 및 전략 적용
5-4. 유관분야와의 협업 거버넌스 확립	• 중앙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연계 · 협력 강화 • 지자체 차원의 유관기관 연계 · 협력 강화
5-5.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피드백 활성화 • 청소년정책 분야 평가체계 개편